

성장을 위한 진통과 소통

2003년 국악계의 이슈와 특징들

글_ 전지영 음악평론가

올해(2003년)는 국악과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했다. 예년과 달리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고, 그와 함께 참여한 쟁론들의 대립이 있었다. 올해 국악계의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이라고 하면, 국립국악원장 교체와 관련된 잡음들, 종묘제례악 왜곡 논쟁, 국악경연대회 비리와 판소리 명창들의 구속,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선정된 것, 그리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국악인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것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 매 사건 하나하나가 국악인뿐 아니라 국악과 무관한 일반인들로부터도 커다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들 개별 이슈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올해 국악의 전반적인 흐름과 현주소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

국립국악원장 교체

올해 국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새로운 국립국악원장 임명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이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악계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 그리고 정치권에서까지 참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 국립국악원장을

지원했던 후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김철호 현 국립국악원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깊어진 불신과 감정의 골은 당분간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처음 발단은 문화부 측에서 소위 코드에 맞는 인물을 뽑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비롯되었는데, '전국 대학 국악과 교수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국악원장 임명 무효와 문화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코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위 '조선·중앙·동아'의 메이저 신문들이 가세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전국 대학 국악과 교수 포럼'이라는 단체는 이 사건 이전에는 그 실체가 있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단체였고, 그 선언문이나 활동 성향을 보면 역시 당시 김철호 후보의 반대편에서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는 성격의 단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단체이면서도 마치 전국 대학 국악과 교수를 대표하고 나아가 국악계의 전반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단체인 양 행동을 했고, 언론에서는 그들의 말이 마치 국악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국립국악원장 자리다툼은 심사위원 선정 의혹과 특정 후보를 지원하

는 단체의 속보이는 언론 플레이로 점철되면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냉철히 되돌아보면, 이 사건이 얼핏 현 정부 들어서 계속된 소위 '코드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국악계가 얼마만큼 보수적 정서에 안주하려고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측면이 강하다. '전국 대학 국악과 교수 포럼'이나 소위 '조·중·동' 측에서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의혹을 묻고 늘어지면서, 당시 김철호 후보(편의상 후보라는 말을 사용한다)가 민예총 출신이었고, 코드 인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형편이었지만,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철호 후보의 약점은 '연주자와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이가 국악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으나, 보수적 인사들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자신들의 대리인인 또 다른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은 감춘 채, 문화관광부의 심사 공정성 문제와 '코드 인사'라는 것만을 묻고 늘어졌던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들 역시 국립국악원장이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당시 그들이 그토록 김철호 후보를 반대했던 이유가 그가 기관장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민예총 출신이었고 그것이 소위 '코드 인사'라는 것 때문이었다는 점에서(그리고 코드에 맞는 인물을 고르기 위해 문화관광부 측에서 심사위원을 정당하지 못하게 선정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는 보수적 국악인들과 일부 언론의 지나친 자기 방어였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일차적으로 심사위원 선정에 의혹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마치 민예총 출신의 인물이 국립국악원장이 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하

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실 김철호 후보는 민예총 출신이긴 했어도 성향이 급진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가장 보수적인 연주단체인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의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 대학 국악과 교수 포럼'을 비롯한 보수적 인사들과 '조·중·동'의 당시의 행동은 약간의 변화나 개혁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립국악원장 자리를 사이에 둔 진흙탕 싸움은 국악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크게는 보혁 대결의 양상이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최소한의 변화마저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일부 보수적 인물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갈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유난히 보수적인 국악계에서 한 번은 거처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었으며, 아직도 보수의 벽은 높고 개혁의 바람은 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종묘제례악 왜곡 논쟁

국립국악원장 교체와 함께 올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이 종묘제례악 왜곡 논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김세중이 지난 『문화예술』 9월호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종숙 박사, 남상숙 박사 등에 의해서 종묘제례악이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이 되고 있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주류 국악계의 담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이 역시 갈수록 감쪽싸움으로 번질 우려를 보이고 있다. 종묘제례악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시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단순히 정리하자면, 하나는 우리의 음악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제시

올해 국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새로운 국립국악원장 임명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이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악계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 그리고 정치권에서까지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에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18세기 정조 시대에 당시 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종묘제례악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곡되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 모두가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논박할 만한 논리들도 서로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왜곡되었다' 또는 '왜곡되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단정하고 선언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객관적인 학술 토론에 의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서로간의 평행선을 사이에 두고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서로에게 이것은 이러이러하다는 반론을 내도, 자신의 의견만을 다시금 강조할 뿐 상대방의 반론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대해서도 양비론을 펼칠 수밖에 없다. 왜곡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종숙 박사의 학위논문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국악계의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논의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이지 않고 바로 신문사 사회면을 장식하는 데 열을 올렸던 느낌이다. 자신의 주장은 철저하게 옳을 것이고, 국립국악원은 친일경력이 있는 이들의 체자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종묘제례악이 일제시대에 왜곡되었다는 단정적인 기사가 언론매체를 타고 나가면서부터 이 논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국립국악원 측의 반론은 사회부가 아닌 문화부 기자들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이때부터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결국 학술적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언론을 등에 업고 해결하려고 한 태도는 잘못된 시작이었음은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학술 논의를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되고 감정싸움으로 변진 데는 이런 '왜곡론자'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주류 국악계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왜곡론자들이 왜곡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학술 논의보다 언론 플레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주류 국악계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국악원 측에서 현실에 대해 늘 안이한 자세로 바라보고 대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실 김세중의 말대로 왕조시대도 아닌 오늘날 전주 이씨의 종묘제례악 문제를 국립국악원이 다 뒤집어쓸 일은 아니다. 문제는 지난 시기에 이왕직 아악부 출신 인사들에

의해 국립국악원에서 지나치게 궁중음악이 높게 자리 매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치 전적으로 국립국악원의 문제인 양 간주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또한 종묘제례악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아직도 일제 잔재를 못 버리고 있는 것인 양 (왜곡론자들이) 몰아붙이는 것 역시 국악원의 그간 행적이 벌미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땃땃하든 땃땃하지 않든 일제시대와 현대의 국악사 연구가 마치 금기시되어 온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친일을 친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친일이 아닌 것을 친일이라고 해도, 또한 왜곡을 왜곡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왜곡이 아닌 것을 왜곡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반론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종묘제례악 논쟁에 있어 상호간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왜곡론자와 국립국악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립국악원장 임명에서와 달리 종묘제례악 논쟁은 분명 보혁 대결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 국악계를 비판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종묘제례악은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게 들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가 국립국악원장 임명 과정에서처럼 보수적인 국악계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정 인맥 밖의 인물들에게는 다분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난 시대의 국립국악원의 이미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의 어

두운 시대의 국악계의 면모를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 논쟁이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

국악경연대회의 비리

각종 국악경연대회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난 것 역시 올해의 커다란 사건 중 하나였다. 심사위원이 금품을 받거나 시상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관행'이 적발된 것이었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뇌물이나 금품 수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악경연대회에서는 가장 큰 심사기준이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누구의 제자인가(누구에게 배웠는가)?' 또는 '누구의 자식인가?' 라는 것이라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정도이다. 조상현 판소리 명창의 구속을 시작으로 유명 국악인들이 조사되고 또 구속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극히 일부라는 것 역시 다 아는 사실이다. 실력보다는 돈과 인맥이 경연대회 입상을 가져다주는 상황은 결국 다시 고액을 들여서 유명인사에게 레슨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만든다. 소위 명인·명창들의 레슨비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대물림되고 있고, 막 국악에 입문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흔히 이런 사건을 접하면 사람들은 구속된 당사자를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인간으로 간주하고,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만큼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식조차도 희미해지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과거 도제식 학습 전통이 비정상적으로 이어진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작고한 강도근 명창처럼 이전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스승 집에서 거의 머슴 살다시피 하며 온갖 굵은 일을 해주면서 음악을 익혔다. 그런 만큼 구박도 받고 야단도 많이 맞게 되지만, 당시에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였고, 어찌 보면 예인들에게 스승은 부모님보다도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런 스승의 절대적 권위는 학습과정에서의 소위 '친자(親子)' 관계에 기반한 정신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스승에 대한 절대적 권위는 그대로 전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위는 이전처럼 친자적(親子的) 유대가 아니라 스승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구조' 속에서 유지가 되고, 조직체계의 하위단계에서 있는 이들은 당대의 유명인사의 이름 석자를 빌리기 위해 '돈'을 써야만 한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조직체계에 편입할 수 없고, 그 조직체계에 편입하지 못하면 그 인맥에 합류하지 못하며, 그럴 경우가 땅에서 예인으로 살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오늘날 전통음악의 재생산은 '돈'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움에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돈'의 의미는 학습에 대한 정당할 수준의 사례가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이 기성 국악계의 인물로 성장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레슨비와 사례비와 뒷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

기 때문에, 비리가 오히려 당연시되는 풍조가 되었고, 수뢰 혐의로 구속된 명인·명창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 없이 걸렸다'거나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생사람 잡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악경연대회와 관련된 비리는 비단 국악경연대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음악 전승 과정이 총체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뿌리 깊은 병폐라고 할 수 있고, 유명인사 몇 명이 구속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물론 모든 국악경연대회가 다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우선은 실력보다는 돈이나 계보가 중시되는 국악경연대회의 구조부터 개선해야 하고,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다시 힘을 가지고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음악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에 의한 '계보'가 중시되는 상황은 예술고등학교나 음악대학의 교과과정까지도 부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제식 학습 전통이 왜곡된 고비용 학습 구조로 변질된 이런 상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국악경연대회 비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몇몇 국악인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라 국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학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선정

11월 7일 판소리가 유네스코(UNESCO)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선정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로는 지난 2001년의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이후 두번째이다. 국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특히 판소리의 보존과 활성화가 보다 정책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판소리는 이미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

올해 국악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보수적 사고의 기존 관행들과 타성들이 강하게 도전을 받았고, 전통음악의 보존과 전승 구조의 개선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한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국악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정이 돼 있고, 산조와 함께 전통음악 중에서는 가장 보존과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국악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판소리는 고정적인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 스타급의 유명인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그 음악적 특성상 서울과 호남지방에서 주로 활발하게 연행되고 전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국악을 대표하는 장르가 이 판소리라고 할 만큼, 현재 판소리는 국악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선정된 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그 보존과 전승에 더 힘쓰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이 현재 타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판소리가 지금처럼 마니아층을 확보하면서 스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심각한 고민의 요구이다. 한 사람의 판소리 명창이 탄생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고된 훈련을 필요로 한다. 득음의 과정은 그만큼 어렵고, 소리광대로서의 작은 명성 하나를 얻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판소리 명창이 인기를 얻고 인간문화재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득음의 과정은 지난(至難)하지만,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일부러 고된 소리 길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많다는 것과,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도 소리꾼으로서의 기량을 계속 닦으면서 자신의 예인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판소리를 하라고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특정 인맥에 끼지 못하면 대회에서 입상을 못하고 돈이 없으면 레슨도 하기 힘든 구조라면, 판소리 보존과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결국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떠오르는 문제 역시 판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악계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내로라 하는 명인·명창들이 진정한 자신의 '친자(親子)'로서의 제자를 키우기보다는 물질적 탐욕에만 길들여져 있다면, 판소리를 포함한 국악계의 전망은 극히 어두울 것이다. 더구나 최근 판소리계는 각 계파에 따라서 일종의 '문중(門中)'을 형성하고 있고, 개인으로서의 존재뿐 아니라 '문중'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퇴행하고 있는 인상이 강한데, 이 경우 자칫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극도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분위기가 굳어질 우려가 있고, 다른 '문중'과의 알력관계에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판소리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고 자축하기 이전에, 판소리의

전승 방향에 대한 반성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판소리 보존·전승의 구체적 고민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판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국악계 전반의 문제이고, 판소리가 그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성 국악인들의 자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성 음악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향유하기만 하고, 후학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보존과 전승의 기반은 급격히 약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스러진 유명 국악인들

어느 해에나 국악인들의 부름은 있어 왔지만, 올해는 워낙 중요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서 아쉬움을 주었다. 대표적인 원로 판소리 명창인 박동진, 정광수 명창이 각각 7월 8일과 11월 2일에 타계했고, 가장 대표적인 국악 작곡가인 이성천 전 국립국악원장이 9월 29일에 타계했으며, 이 밖에 김용만 경상북도립국악단 지휘자가 10월 2일에 세상을 떠났다. 특히 박동진, 정광수 명창은 '문화재'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살아 있는 판소리의 역사이자 전설이었다는 점에서, 이성천은 초창기부터 국악 작곡의 방향을 모색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국악 작곡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사실 명인·명창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늘 아쉬워하고 그 빈자리를 허전해하면서, 곧장 새롭게 빈자리를 메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다. 또 그것이 명인·명창의 후예로서의 올바른 자세였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박동진 명창의 걸쭉한 재담이나 정광수 명창의 멋진 발림을 무대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성천의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그 우울

함을 달래줄 많은 예비 명인·명창들의 활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과거 박귀희·김죽과 등의 명인들이 타계했을 때처럼, 몇몇 후학들과 제자들이 작고한 명인들의 이름을 우상화하면서 그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권위를 높이는 데 열을 올렸던 모습들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작고 명인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자족하기보다는 그들을 딛고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스승의 이름의 지원을 업고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넓혀가려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는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올해의 모든 이슈들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다. 정당한 자신의 실력과 예술혼으로 승부하려는 자세만이 제2, 제3의 박동진·정광수 명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올해 국악계의 주요한 이슈 및 쟁점들을 정리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립국악원장 교체나 종묘제례악 왜곡 논쟁에서처럼 국악계의 보수적 흐름이 도전받고 시험당하는 측면이 있었고, 국악경연대회 비리나 판소리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선정, 그리고 유명 국악인들의 작고 소식에서처럼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개혁이 요구되거나 일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올해 국악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보수적 사고의 기존 관행들과 타성들이 강하게 도전을 받았고, 전통 음악의 보존과 전승 구조의 개선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한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과정은 앞으로 더 나은 국악계의 전망과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유난히 큰 사건들이 많았던 만큼 국악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